화재 피하다 추락… 하반신 마비 금타 20대 노동자의 울분

20대 노동자 대피하려다 지붕서 추락, 하반신 마비

"책임자 사과도 없어, 수수방관"… 책임 전가 의심도

지난달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대피 중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20대 청년의 삶은 한 달 전 화재 현장에 머물러 있다.

20대 청년 노동자 가족은 사고 발생 이후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소극적인 대응에 허탈감만 느끼고 있다.

광주공장 화재 부상자 A(24)씨의 어머니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대책 마련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역 직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취업해 3년째 일을 하고 있다. 정련반에서 타이어에 들어갈 고무를 반죽하는 공정을 맡았다.

사고 당일에는 교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나자, 매연을 피해 대피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했다.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A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12번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업을 제쳐두고 A씨를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사측의 책임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사측이 아닌 아들의 직장 동료를 통해 뒤늦게 들었다"며 "사측으로부터는 아들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져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어떠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측이 아들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화재 당시 동료 직원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있다. 대피하는 순간 상황이 모두 음성으로 저장돼 있다"며 "그런데 사측에서 그 파일을 아들 동료에게 공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경찰이든 사측이든 다 공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병원도 일부러 사측의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곳으로 왔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말로는 무슨 일인들 못 하겠냐. 사측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 사고 발생 경위 등도 공식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A씨가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는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오권철 기자

매각교섭 무산에 회생 방식 이견도… '풍전등화' 위니아딤채

법정관리인 궐위 상태에 교섭 무산… 18일 매각 설명회

자산 매각 방식 안내 전망… 노조 "고용 안정 보장해야"

기업 회생 절차 만료 이후 재도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딤채에서 노사 간 매각 교섭이 한 차례 무산됐다.

사측의 법정관리인이 구속돼 교섭 대표자 선정에 난항이 이어지고 고용 보장이 불투명한 자산 매각 회생안에 대한 노조의 우려와 반발이 여전해 기업 정상화를 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노사 간 매각 교섭이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에 '12일 만나 매각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적인 자리에 세울 협상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니아딤채에서는 사측 법정관리인 신분인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중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적 지위를 가진 협상 대표자 궐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사측 비상대책위(비대위) 체제에서 임시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지만 아직까지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았다.

대신 사측은 비대위를 통해 오는 18일 노조와 만나 매각 진행 상황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측이 자산 매각 방식의 회생안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자산 매각 방식의 회생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내오고 있다.

자산 매각 방식은 사측의 김치냉장고 브랜드인 '딤채' 등 유·무형의 자산만 인수자에게 파는 형태로, 기업의 이름은 존속시킬 수 있지만 현직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보장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측이 지난달 노사간 만남을 통해 자산 매각 방식을 설명한 만큼 이를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회사에 소속된 위니아딤채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사측이 추진 중인 자산 매각 방식이 법원을 통해 확정될 경우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은 물론 퇴직금 한 푼도 없이 내쫓길 것"이라며 "회생법원은 위니아딤채가 영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위니아딤채는 모기업의 경영 위기에 2023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유찰을 겪어왔다.

올해 초 사모펀드인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인 광원이엔지가 손을 잡고 인수에 나섰으나 지난 3월31일까지 진행된 2차례 계약이 모두 무산됐다.

회생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4월 중순에는 2차 회생 계획안이 제출돼 현재 재도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위니아딤채에 대한 회생 계획안 2차 신문은 오는 20일 예고됐다.

광주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위니아는 현재 노동자 한 명당 최대 80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규 기자

'온열질환 대비'… 광주소방 폭염구급대 운영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폭염구급대'를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폭염구급대'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급차량 33대를 지정하고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체온계 등을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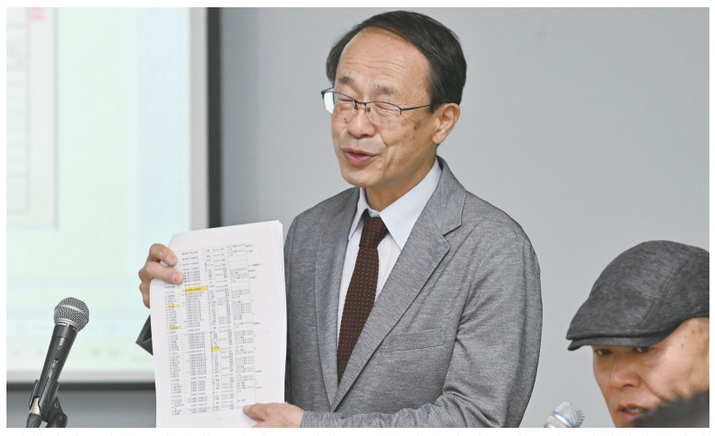
또 관할 내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펌뷸런스' 27대를 예비 출동대로 지정했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구급 활동 기능을 갖춘 소방펌프차다. 구급차가 없을 때 출동해 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소방안전본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도 완료했다.

최정식 119대응과장은 "시민들은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며 "환자가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타케우치 야스토씨가 13일 오전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밀리환초 학살 사건의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전남 출신 대거 확인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 간담회

日 정부 문서 속 퀘젤린 강제노역 피해 확인도

사건 80년 째… "진상규명·유해 반환·정신 계승"

태평양전쟁 당시 남태평양 밀리환초 강제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640명 중 99%인 635명이 전남도민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자와 유족들은 밀리환초 강제노역·학살 사건 80년 째를 맞는 올해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해반환 등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인 연구자 다케우치 아스토씨가 연구한 밀리환초 강제노역·학살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밀리환초 강제노역·학살 사건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1945년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 내 체르본 섬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반란죄를 씌워 학살한 내용이다. 일본은 1942년 초 강제로 끌고 온 조선인들을 밀리환초에 군속 신분으로 배치, 비행장 활주로 건설 등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가혹행위로 숨진 조선인들의 시신에서 나온 인육을 고래고기로 속여 배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조선인들이 섬 탈출을 감행하자 일본군은 중무장한 토벌대를 보내 반란죄를 씌워 218명을 총살했다.

다케우치 아스토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와 '해군 군속 신상 조사표'를 최근 입수,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강제노역에 투입된 조선인들의 규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통해 밀리환초 강제노역에 투입된 조선인 수는 640명이었으며, 이중 635명이 전남 출신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인적을 파악한 결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가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천인소송' 에 참여했던 원고 23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남 구례 등지에서 형제가 밀리환초 강제노역에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마셜제도 내 퀘젤린 환초 등지에 투입된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명부도 새롭게 확인됐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반도공원 퀘젤린·루오트 옥쇄자(玉碎者) 명부'를 통해 파악된 강제노역 피해자 677명은 대부분 전남, 경기, 경상도 등지에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강제노역에 투입된 조선인들 중에서는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케우치 야스토는 "일제에 의한 강제노역 피해 회복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근본일 것"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한·일 양국이 진상규명과 유해반환, 정신계승을 필두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에 의해 남태평양 팔라우 남양군도로 끌려갔다가 숨져 돌아오지 못한 강제노역 피해자 서조왕금씨의 유족 태석(84)씨도 "아버지의 성함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나라가 힘이 없을 당시 아버지가 끌려갔다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숨져서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과만이 바라는 유일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시스